

노동 포커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빨라 보이지 않을 몇 가지 정책 항목들

허재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인구는 1991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핵심연령계층(30~49세) 인구는 2007년부터 감소 중에 있다. 아직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의 3,619.0만 명(73.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40년에는 2,652.5만 명(57.2%)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례없이 빨라 65세 이상 인구가 2018년에 전 인구의 14.3%, 2026년에는 20.8%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15~64세 인구는 2010년 6.6명에서 2040년에는 1.8명으로 감소한다.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를 통해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한편, 노인부양부담을 늘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다시 성장률을 제약하는 저성장 함정에 경제를 가두어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 속에서 성장을 위한 적절한 노동공급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10년 안에 가시화될 주요한 도전이다.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고성과작업장의 확산이나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 제고로는 고령화 속도를 보완할 수 없어 적절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 노동력 공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동포정책, 외국인력 활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인력 활용방안과 혁신적 이민정책 수립은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보장제도에는 상당기간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고 근로빈곤층이 감소하기 어렵게 하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저임금근로자 및 상대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늘어나면 현재의 저임금근로자/상대빈곤 문제는 내국인-이민자 양극화 문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저임금일자리가 이민자 일자리와 중첩되어 내국인과 이민자간의 갈등이 폭발적 사회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이민정책 및 외국인력 정책은 준비되고 있는가?

청년층 구직난의 배후에는 인력 미스매치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청년층 취업애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금과 같은 고등교육 공급이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노동력 중 대졸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노동시장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취업할 고직능 일자리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대졸자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다. 고등교육 수요 결정에는 취업가능성 이외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노동시장 수급 상황에 맞추어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층 구직난을 초래하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처방책은 모색되고 있는가?

2011년의 정책운용 방향을 보고 든 생각들이다. 